

광주,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또 표류

각화동 교도소 부지...내년 국비 반영 안되고 구치소 이전도 난항

세계적 인권도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 장기화 우려

광주를 세계적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을 포함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5월 복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문흥동 현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비용이 2014년에 이어 2015년도 국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데다, 사업추진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주시, 5·18단체 등이 사무실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마저 빚고 있어서다.

여기에 광주교도소 부지의 땅 주인인 법무부가 광주시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전당 자리에 구치소를

짓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당 착공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복구 문흥동 일원 19만7021㎡(현 광주교도소 부지 10만6771㎡ 포함) 부지에 1314억원(국비 1104억원, 민자 210억원)을 들여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곳에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비롯한 김대중대학원 대학교, 민주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훈련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유스호스텔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사업의 핵심인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자체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민주주의전당 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1월 광주와 서울, 마산 등 3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하기로 결정했지만, 2년째 단 한곳의 국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최근 안전행정부의 이사장 임명을 놓고 내부에 휩싸였으며, 이사장 임명 반대 측에 섰던 5·18민주항쟁 서울기념사업회를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광주시 등과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기념사업회측은 연 12억원에 이르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내년 1월 규모를 축소한 사무실(연 임대료 8억원)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5·18 등 민주화운동 단체들에 사무공간을

내주는 게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가 고집하고 있는 한국민주주의전당 예정 부지 내 구치소 건립 계획도 해결 과제다. 법무부는 내년 5월 이전을 목표로 복구 삼각동에 새 교도소를 짓고 있으며,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들이 머무르는 구치소는 인권 등을 고려해 현 문흥동 광주교도소 부지에 분리·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그나마 최근 들어 광주시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할 경우 구치소를 옮길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혐오시설인 구치소 건립을 받기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현재로서는 새로 짓는 교도소 내에 공간을 구분해 구치소를 만드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준공 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영산강 인근 농경지 재해 예방을 위해 영암호·영산호 배수갑문과 연락수로를 확장하는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이 착공 5년 만에 준공됐다. 8일 오후 해남군 산이 배수갑문 현장에서 이동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비리 '복마전'

도 감사, 21건 적발 17억 회수

전남도가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예

산 낭비 및 업체 밀어주기, 업무 태만, 운영 부실, 지도·감독 소홀 등 21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 징계 3명 등 직원 19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7억3007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했다. <관련기사 3면>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해 40억 1155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공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해왔으나 가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지구를 2개로 나눠 발주하면서 10억원을 낭비하고, 설계자문위원도 아닌 사람을 주관적 평가(SOQ) 위원으로 임의선정하기도 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비리 차단을 위해 무작위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관계자가 직접 선정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당시 전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팀장 등 2명을 중징계 요청하고, 특정업체와 유착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또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지하시설물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공사와 분리해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시공업제한대 용역을 맡도록 해 3억1000여만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전남도는 이밖에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공사, 경도골프장 드라이빙레인지 조성공사,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건립공사, 천일염 유통사업 운영 등과 관련해 공사 직원 14명에 주, 2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해양케이블카 타보니 ▶11면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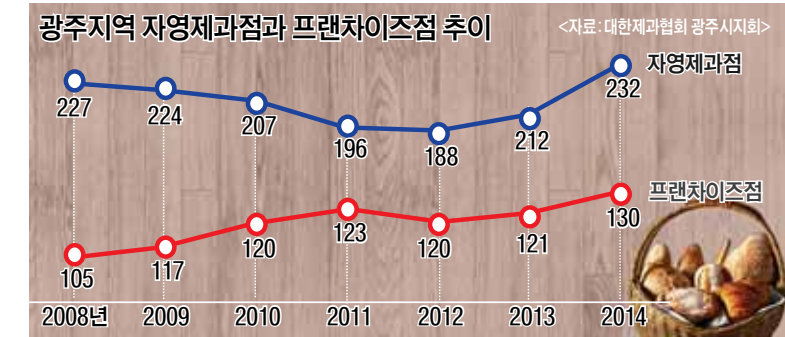
문의: 062)605-1114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맛있는 빵·착한 가격 동네빵집 인기 '빵빵'



색다른 마케팅·기술력으로

프랜차이즈 틈새 부활 성공

“호 ~ 호 ~ 맛있는 빵, 착한 가격에 드셔보세요.”

전반적인 장기불황에도 맛과 색다른 마케팅 전략으로 무장한 광주 지역 '동네빵집'들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지역 상권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고 있다.

8일 대한제과협회 광주시지회에 따르면 11월 현재 광주 지역 동네빵집은 232개로 지난해 2월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 시행 이후 212개에서 21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여만에 무려 10%가 늘어난 수치다. 동네빵집이 가장 어려웠던 2년전 188개 보다는 무려 44개 22.3%나 증가했다.

반면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121개에서 130개로 9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동네빵집의 증감수치가 바뀐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지난 2001년 광주시지회 회원업소는 414개로 이중 동네빵집은 366개, 대형 프랜

차이즈 제과점은 48개였다.

이 같은 동네빵집의 약진은 동반위 적합업종 지정효과 외에도 웰빙바람에 따른 수제 빵 선호 경향과 동네빵집들의 지구 노력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빚어낸 결실이다.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압도하며 인기를 끄는 업소도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개업 20여년만에 5곳 매장에서 연 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베비에르'. 토종 브랜드 빵집으로 백화점에 입점해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베비에르의 성공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로 무너져가고 있는 지역 상권의 부흥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 사례로 동네빵집들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40년을 이어오며 광주를 대표하는 빵집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궁전제과' 역시 동네빵집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든든한 배춧묵이다. '궁통알 빵'으로 잘 알려진 궁전제과는 총장로 본점을 비롯해 두암동·화정동·진월동·운암동·흑석동 등 광주시내 5곳에 직영점을 둔 향토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2면으로 계속>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구의회 폐지·자치경찰단 설치

지발위, 2017년까지 확정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또 현재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우선 서울시의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시도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

하되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발위는 오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발위는 또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질서유지·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토록 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원·공무원연금, 속도가아니라방향과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화할 것입니다.

일방강행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50만 교육자들에게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의 자긍심'을 돌려주십시오.

※ 이 광고는 전국 교원들의 연금투쟁기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의 졸속적 일방 강행을 중단하고, 당사자인 교원 및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①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보전 성격의 공무원연금과 노후 소득 보장성인 국민연금, 받는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 기여금부담률이 국민연금은 4.5%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7%로 훨씬 더 많이 내고 있고, 연금수령이 가능한 가입 연수도 국민 연금은 10년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0년입니다.

▶ 특히, 대다수 교원은 타직공무원보다 긴 33년간 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있음에도 연금 받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보수는 민간 기업의 78% 수준이고, 퇴직금은 39%에도 못 미칩니다. 공무원 연금은 열악한 처우와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금지 등 신분적 제약에 대한 보상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정부는 현재 가치 30조원에 이르는 연금기금을 동의도 없이 부당사용해 놓고도, 밀려난 기금부터 갚으려는 교원들의 요구에 대해 묵묵 부답입니다.

▶ 교원과 공무원에게 회생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부당사용 및 부실운영한 공무원 연금기금부터 갚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부가 먼저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③ 공적연금 기능을 상실한 새누리당의 일방적 졸속 법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 새누리당 법안은 개인의 부담률을 7%에서 10%로 올려놓고, 정부부담률은 7% 그대로 두는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 연금 재정에 대한 '정부 보조금 의무 조항'도 숨어서 삭제했습니다. 교원과 공무원 가족 600만명의 노후가 달린 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 새누리당에 법안의 기초가 된 연금재정 추계 산식의 정확한 자료 공개를 요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이 땅의 50만 교육자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지구촌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당사자인 교원 및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교육자들이 국가건설자의 자긍심을 갖고 후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